

건설연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시공사 권한 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시공사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건설업의 특성마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률은 98.3%로, 제조업(76%)과 용역업(64%)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수급사업자 간 계약체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과 분쟁 요소를 사전에 막고 계약서 작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보급하고 있다. 원래 권장사항이지만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사실상의무화돼 있다.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와 공공 발주기관의 자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요령 등을 통해 적격심사, PQ 심사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채택에 대한 가점을 주기 때문이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67곳이 표준하

건설업 활용률 98% 달하지만 하도급 불공정 제제 내용 없이 원사업자 의무·금지사항만 잔뜩 분청 사전예방 기능도 떨어져

도급계약서 활용을 권고하는 조례·훈령을 운영 중이다. 12개 지자체는 이에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그 중요성도 커지고 있지만 건설현장에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전영준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내용이 하도급 위주로 편향돼 있고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데다 구체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하도급법에 기초해 만들다 보니 대부분 계약문구가 수급사업자 편을 들고

있다. 계약이행 태만 등 수급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내용은 거의 없다.

건설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것도 아니다. 대부분 이미 법률로 제정돼 있는 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만을 담고 있어 실제 현업에서 활용하기엔 한계가 많고, 계약서로서의 독자성도 부족하다.

사업 특성 및 특정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문이 부족해 계약당사자 간 해석상의 이견도 잦다.

반면 대다수 외국에선 각 건설공사 참여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에 의해 공표된 표준계약 약관을 사업 특성에 맞게 스스로 권고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8개 건설관련 단체에서 제정한 52개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약관이 쓰이고 있다.

일례로 미국건설협회를 비롯한 40개 건설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컨센서스독스

(Consensus Docs)의 경우 프로젝트 유형 및 발주방식별 특성에 맞게 29종의 건설하도급 관련 표준계약약관 및 관련 서식을 제공한다.

또 외국의 하도급 표준계약약관은 대부분 100여개 이상의 조문으로 구성돼 원사업과 수급사업자의 역할과 업무 범위, 대금지급 방법, 제재조치, 클레임 처리 등을 상세히 명시해 조문 해석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국제엔지니어링건설링엔맹(FIDIC)의 건설하도급 일반조건과 비교해 봐도 한국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하도급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조항을 비롯해 하도급 플랫폼·자재 소유권, 하도급 기간 연장, 하도급 변경 제한서 등에 대한 내용이 대거 빠져 있다.

전 부연구위원은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진정한 하도급계약이 이뤄지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자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계

약당사자 보호와 산업 특성 반영을 위해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계약당사자인 원·하도급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계약서 조문에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구분해 사업 특성이나 계약상대자의 현황을 고려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단일 계약서 조항의 단순한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외국은 발주방식별 또는 간이계약서 및 일반계약서를 구분해 하도급공사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로 대표되는 정부 주도의 단일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벗어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발주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공동으로 표준계약약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전 부연구위원은 “사인 간 거래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제·계정을 통해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

건협, 대기업·중소기획총 본격 운영

“다양한 회원 목소리 협회 정책에 담을 것”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사진)는 회원들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건협은 회장 자문기구로 7개 위원회를 두고 있다.

기획위원회, 윤리위원회, 중소기업육성위원회, 조정위원회, 사회공헌사업추진위원회는 기존부터 운영해왔고 유주현 회장 취임 후 대기업정책위원회와 건설산업원로회의를 신설했다.

유 회장은 “각종 위원회를 통해 경륜있고 열심히 일하는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협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위원회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30위사를 대상으로 사회기반시설(SOC), 민간투자사업, 주택, 금융·세제 분야 임원 30명 이내로 구성했다.

제43차 IFAWPCA 한국대회(5.30~6.2)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약한 박태원 두산건설 부회장을 비롯해 진상화 현대건설 상무, 양기출 포스코건설 상무, 김토문 대우건설 상무, 강태구 대입산업 상무 등 28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현 회장과 같은 2020년 2월까지이다.

대기업위원회는 △신수요 창출 및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건설정책 및 주요제도 개선방안 △해외건설 관련 제도개선 및 수주확대



방안 △기업 간 협력강화 및 공정·투명한 경쟁문화 제고방안 등을 주로 다룬다. 위원회가 심의·자문한 사항 중 중요 안건은 회장이 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다.

건협은 또 22대 기획위원회와 19대 중소기업육성위원회도 이날 확정했다. 신입 기획위원으로는 고문철(양우), 김창환(상록), 김한주(경아) 위원을, 중소기업육성위원으로는 홍상익(풍창), 김효균(태조), 박용석(건설산업연구원) 위원을 각각 위촉했다. 새 위원들로 교체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연임이다.

중소위원회는 12일, 기획위원회는 13일, 대기업위원회는 이달 말에 각각 첫 회의를 갖는다.

건설업계 원로들의 자문기구인 건설산업원로회의의 구성도 곧 마무리된다. 원로회의는 전임 협회회장과 시·도회장, 대의원, 각 위원회 위원 가운데 30인 이내로 꾸려진다.

건협 관계자는 “대·중소 및 지역 건설업계 간 상생 방안과 건설산업 정책방안 등을 한데 모으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새 정부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 건설 시·도 회장에게 듣다 하용환 건협 경기도회장

민간공사도 지급보증 의무화... 보호장치 절실

“민간공사에도 발주자 대금지급보증 제도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석진건설 대표)은 “민간공사의 불공정한 공사비 지급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지역 건설사들이 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민간 건축주들의 공사대금 지연 지연 등에 맞서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공사대금 의무 지급보증 제를 민간공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은 민간 건축주가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원도급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하 회장은 “민간공사는 사적 계약이라는 이유로 발주자의 대금지급, 지연 지급 등으로부터 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민간 발주자들은 공사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건설사에 상납을 요구하거나, 장기간에 걸친 대금 지급 분쟁소송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심지어 계약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사가 폐업하는 경우도 잦다.

하 회장은 “정부의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감축으로 일감이 계속 줄어든 데다, 공공공사 나탈률은 꾸준히 떨어지면서 종합건설사들의 매출액영업이익률도 낮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사 원가 현실화와 나탈률 상향조정 등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입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가 나빠수록 지역 중소기업사들은 더 어렵다. 하 회장



민간발주자 횡포 갈수록 심각 건설업 생산체계가 무너지는 과도한 규제·정책 지양해야

“건설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근간까지 흔들리는 지방정부의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재발의됐다 건설업계 반발도 상정여 부류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제’가 대표적이다.

하 회장은 “건설정책도 과도한 규제와 제약이 아닌, 기업들이 제대로 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례로 종합건설사의 등록기준을 기업 규모별로 재조정하는 게 하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천편일률적인 건설사 등록기준을 참여 공사 규모에 따라 자본금과 인력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지역 총생산액(GRDP)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은 17.3%로 전국 평균(15.6%)보다 높다. 그만큼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지역 인프라 공약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구축 및 분당선 등 도시철도 연장 △남한 통일경제특구 △경기도 1+5 디지털시티 육성 등을 약속했다. 그는 “SOC 투자를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개선 등 효율적인 투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사들의 새 먹거리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 회장은 “전체적으로 신규 건설물량 증가가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노후 인프라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건설물량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세제나,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화를 유도하고 지역 인프라 전문가들의 참여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경기도의 특성이 인프라 사업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 회장은 “서울은 도시재생, 노후 인프라 물량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신생 도시가 많은 경기도는 여전히 신규 인프라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회장은 경기도 건설단체연합회 회장으로 겸직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와 손잡고 전국 최초로 ‘경기 건설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 회장은 “이는 경기도와 협력해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건설인의 자긍심 고취, 사기진작, 도내 건설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설경기가 살아야 지역경기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